

베이비부머 “일해야 한다”... 경력 관리·직업훈련 기회 절실

(55~63세)



2025년 신중년 전체 인구 31.5% 신중년, 고용률·경제활동참여 증가 연령 높아질수록 고용의 질 하락 재취업 실패 신중년, 창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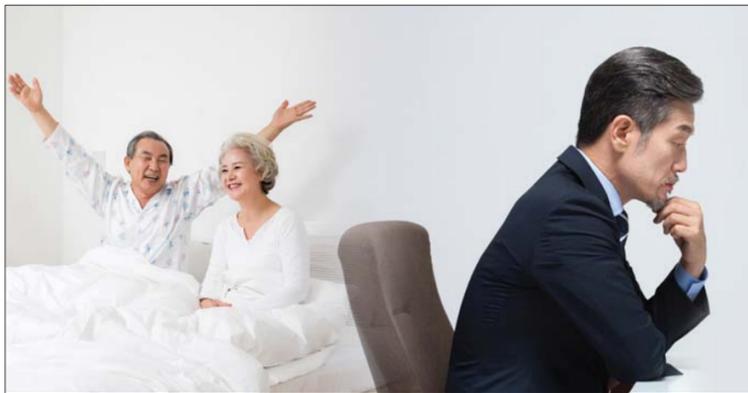
바야흐로 100세 시대인 만큼 일하는 신중년이 늘고 있다. ‘신중년’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용어로, 주된 일자리에서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를 일컫는다. 기존의 ‘고령자’ 등을 대신해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았다.

2025년 신중년 예상 인구는 약 16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 생산가능인구의 3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신중년의 인적자원 활용이 국가 경쟁력 확보,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베이비부머’ 증가가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에 늘어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자료에 따르면 50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에게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직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인생 이모작을 꾸리려는 중장년층이 눈여겨볼 만한 직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메트로신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생 2막 새로운 도전: 베이비부머 직업 탐색 가이드’를 토대로 중장년층이 도전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유투이미지

~69세 ‘신중년’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상반기 50~6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23만 2000명) 대비 29만 5000명이 늘었다. 이 신중년 세대의 고용률은 2014년 상반기 65.7%에서 올해 66.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67.4%에서 68.6%로 늘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도 같은 기간 2.5%에서 3.3%로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8만 2000명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베이비부머’ 인구 증

가(42만 7000명), 정부의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안정망 강화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같은 신중년·노년층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취업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50~59세 인구는 지난해는 7만 4000명이 늘었고 올해 2월 누적 10만 9000명이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지난해 53만 2000명, 올 2월 누적 53만 9000명이 증가하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에 따라 5년 뒤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은 60만 3000명이 증가하는 반면 15~64세는 44만 3000명

이 감소할 전망이다.

◆ 연령 높아질수록 재취업 ‘난관’

그러나 생각만큼 재취업은 쉽지 않고, 고용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신중년 경력개발 상담자를 위한 역량강화서’에 따르면 신중년들은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중년 10명 중 7명 이상(71.7%)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50.7%)은 150만~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길 바랐고, 평균적으로 71세까지 일하고자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많은 신중년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기존 일자리보다 하향이 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취업에 실패한 신중년들이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점포 창업 등 영세 자영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신중년 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었다. 50대와 60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0대 취업자 중 상용직은 42.5%(267만 9000명)였지만, 60대에선 24.4%(71만 9000명)에 불과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임시·일

용직의 비율은 50대(24.1%)보다 60대(31.2%)에서 더 높았다. 자영업자 비율 또한 60대가 29.9%로 50대(19.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신중년들이 퇴직 후 본인의 경력 경로를 사전에 설정해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경력 개발과 관리, 이·전직 서비스 강화,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노년층 일자리를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애경력설계를 지원 등을 시행·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부터는 대학 진학률도 높고 전문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경기자 son89@metroseoul.co.kr



‘신중년’이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용어로, 주된 일자리에서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

배우자 출산휴가 임금 받고 10일간 간다

노동시간 단축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

10월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일수가 열흘로 늘어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처럼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그간 최장 5일에 처음 3일만 인정됐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월 1일 최초 휴가 사용 노동자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기간 확대에 발맞춰 1회에 한해 분할사용도 가능하다.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대신 유급 휴가기간이 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 지원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4.0일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일 전후로 사용한 현실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달 30일 이전에 현행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거나,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크게 개선됐다. 그동안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분배해 사용할 수 있었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을 분리해서 각각 1년씩 보장하고, 육아휴직미 사용 기간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즉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한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는 제한 없이 분할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된다. 그동안 하루 2~5시간까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1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확대 제도 역시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되지만, 이 달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크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물림 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강남 평당 1억 근접... “실거래가 오름세”

아크로리버파크 59㎡형 23.9억 신고 기존 아파트 평당 1억 넘긴 사례 전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아파트가 23억 9800만원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면서 3.3㎡당 1억원 시대의 첫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도 오르고 있어서다.

‘아크로리버파크’ 실거래가를 3.3㎡로 환산하면 9878만원(만원 단위 이하 절삭)으로 현시점에서 평당 1억원에 가장 근접한 아파트로 꼽힌다. 해당 매물은 12층 높이의 공급면적 80.25㎡, 전용면적 59.95㎡로 공급된 아파트다. 한강 조망권과 양쪽 시야가 차단되지 않아 수요가 많았다.

단지 내 동일 면적의 다른 가구도 이미 24억~26억원의 호가가 형성됐다. 거



지난 29일 아크로리버파크 111동 전용 59㎡는 23억 9800만원의 거래가를 신고하며 평당 1억원에 가장 근접한 신축단지 자리매김 했다.

래가 성사되면 평당 1억원 시대가 도래하는 것.

그동안 ‘반포주공1단지’ 등 재건축 단지가 평당 1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는 있었지만 기존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을 넘긴 사례는 아직 전무하다.

인근 대단지도 앞다투어 추격하고 있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59㎡가

지난 7월 3.3㎡당 약 8200만원에 거래됐고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약 816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래미안 대치팰리스의 경우 7월 실거래가(7596만원)보다 500만원 이상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동은 아크로리버파크가 더 치고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실거래가와 호가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어느 단지의 거래가가 어느 수준으로 신고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또 이미 평당 1억원 아파트가 이미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지하철고속터미널역 인근의 한 중개업소관계자는 “매매 거래 신고제가 60일의 기한을 두고 있는 만큼 계약이 됐지만 신고가 안 된 매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상길 수습기자 sayk6110@

부처·기관마다 제각각... 과기정통부, R&D 표준안 마련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달랐던 연구개발(R&D) 규정과 지침에 대한 공통규정이 마련돼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피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 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 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

한 연구관리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로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